

# 새누리·무소속 예비후보 급부상

## FOCUS 20대 총선... 익산을 지역구 상황 점검

새누리 박종길 전 차관, 선거사무소 개소 후 인지도 상승  
더민주 전정희 의원, 설 이후 당 여론 움직임이 변수  
무소속 이석권 후보, 시민들 호응으로 향후 귀추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으로 인한 야권의 위상이 광에 떨어지고 오히려 여권의 바람이 익산을 지역에 불고 있어 구정 이후 지역정가에서는 4파전 양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표 30%정도의 유권자표를 받으면 당선이 유력해 진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더불어민주당(전정희) 현 국회의원, 김영희 전 익산시의원), 국민의당(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김상기, 이영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 무소속 이석권 등 8

명이 익산을 지역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중앙부처 인맥이 좋은 관계로 전북지역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한명정도는 만들어 주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당선되며 전남 이정현 최고의원 처럼 중앙부대로에서 예산확보를 가져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어 개소식이후 인지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더민주 전정희 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

이며 협력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 더민주, 전북민심잡기 나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북민심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국현안과 당 입지 및 정책 등을 설명하는 등 전략적 광폭행보를 이어간다.

표창원 등 외부영입 인사들도 정읍시와 전주시를 방문해 민생방방에 나선다.

이들은 정읍시장과의 오찬과 풍남문 세월호 농성장 방문, 한지 판매자 간담회, 더불어 콘서트 등을 통해 제이당의 성명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총선체제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총선기획단과 총선정책공약단을 설치하고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기구 구성인을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선거대책위원장 산하 총선기획단과 총선 공약단은 각각의 단장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총선기획단 산하에는 디지털본부, 경선 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 운영지원본부, 조직1본부, 조직2본부, 예산지분본부 등 7개 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중에서 조직1본부는 당무를 조직2본부는 직능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게 된다.

총선정책공약단 산하에는 5~6개 본부를 두되, 평창과 기능 등을 민주정책연구원과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대위원장 직속으로 별도의 흥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추후 야권의 선거연대 논의를 위한 아권통합특위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총선기획단장에 정 전 의원을, 총선정책공약단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선임하는 인선안을 각각 확정했다.

한편 그동안 표류했던 호남특위 설치 문제는 특위 이름을 변경한 후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호남권의 시민사회단체가 특위와 연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

### 원샷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협력제 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내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야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성주 기자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친 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사진은 도의회 의원들이 전주남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신광영 기자

## '더불어성장론'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구체화

### 더민주, 총선서 중점... 공정·선도·네트워크경제 등 구성

#### 김종인 선대위원장 "포용적 성장의 틀 이뤄질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더불어성장론'을 제시, 이를 이번 4월 총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더민주를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야권이 분배에만 관심이 있고 경제성장에는 무관심하다는 국민의당의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경제정책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며 "더민주가 더불어성장론을 출마하겠다"며 "경쟁경제"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체육·환경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방향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을 담았다.

'선도경제'는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네트워크경제'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계층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기존에 당 차원에서 추진해온 성장 전략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이다"며 "이제는 비아이 제야 II,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선도형 경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도 다 포용적 성장론에 접합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로 행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더불어성장론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며 "경쟁경제"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을 담았다.

'선도경제'

는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

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네트워크경제'

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

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계층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기존에 당 차원에서

추진해온 성장 전략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이다"며

"이제는

비아이 제야 II,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

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선도형 경제'

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도 다 포용적

성장론에 접합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민

주화로 행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정

책의 연장선상에 더불어성장론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며 "경쟁경제"

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

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

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며 "경쟁경제"

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

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

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며 "경쟁경제"

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

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

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며 "경쟁경제"

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

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

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며 "경쟁경제"

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연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

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

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

을 담았다.

정 전 의원은